



코리아연구원 특별기획 제 33-1호

2011년 북한 및 남북관계 전망

홍익표

(코리아연구원 기획위원, 북한대학원대 겸임교수)

- I. 후계체제의 조기 안정화와 경제강국 건설
- II. 경공업부문의 정상화를 통한 인민생활 향상
- III. 갈림길에 선 남북관계, 대외국면으로 전환 가능성
- IV. 6자회담 재개와 남북관계 정상화

I. 후계체제의 조기 안정화와 경제강국 건설

북한은 지난 9월말에 개최된 당 대표자회의를 통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3남 김정은을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및 중앙위원으로 선출함으로써 후계체제를 공식화하였다. 북한은 당 대표자회를 계기로 당의 기능을 정상화하고 영도성을 강화함으로써, 2012년 개최가 유력시되는 7차 당대회를 통해 후계체제의 조기 완료를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북의 당면 최대 과제이자 후계체제의 조기 안정화에 관건이라 할 수 있는 ‘경제강국’ 건설에 매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북한 지도부가 의도한 바와 같이 후계체제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국내외적으로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비관적 전망의 근거로는 대부분 김정은의 젊은 나이와 경험부족, 북핵문제의 미해결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지속, 경제난의 지속, 천안함 이후 남북관계 및 대외환경 악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경제난 지속이 후계체제의 조기 안정화에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후계체제가 공식화되었다고 해서 북한의 경제정책이 급변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후계체제가 공식화되었다고 해도 여전히 북한의 최고 지도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며, 기존의 선군경제발전전략을 상당기간 고수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경제정책과 경제운용에 있어 일정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후계자를 공식화한 북한으로서는 2012년까지 인민경제생활 향상과 대외경제 환경 개선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¹⁾ 이는 2012년을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 해’로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고, 후계체제를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전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2011년을 포함해서 향후 2~3년이 북으로서는 경제부문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기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2012년 경제강국 진입이라는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11년에 인민생활 향상과 주요 산업의 정상화에 있어 가시적 성과를 거두어야 한다. 또한 지난 9월 28일 당대표자회의를 통해 공식화된 후계체제를 조기에 안착시키기 위해서도 경제부문의 높은 실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북한의 입장과 정책기조는 금년도 신년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북한은 “올해에 다시 한 번 경공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 향상과 강성대국 건설에서 결정적 전환을 일으키자”라는 제목의 신년사를 발표하였는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 신년사에서조차 인민생활 향상이 최우선 과제로 제시되었다. 인민생활 향상이 2011년 최우선 경제목표로 제시된 것은 역시 2012년 강성대국 대문을 열겠다는 목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 당국은 경제상황 개선의 효과를 주민들이 실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을 거쳐 1998년부터 강성대국 건설노선을 제시하였지만 북측의 식량과 생필품 부족현상은 계속되고 있다. 2000년대 들어 4대 선행부문의 정상화에 주력하였지만, 일반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해당 부문의 정상화가 자신들의 실생활 개선과는 거리가 있다고 느낄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은 강성대국 건설노선과 관련 경제정책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고 지지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인민생활의 실질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II. 경공업부문의 정상화를 통한 인민생활 향상

경제강국 건설이라는 목표 달성과 후계체제 조기 안정화의 관건적 요소가 될 수 있는 몇 가지 경제적 변수들을 살펴보면, 우선 인민생활 개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농업과 경공업 부문의 생산증대 여부이다. 북한은 2010년에도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경공업 및 농업 부문의 증산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는데, 올해에도 이러한 정책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금년도 신년사에서 “올해에 다시 한 번 경공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 전환을 일으키자”고 언급한 부분은 인민생활필품과 관련된 경공업부문이 2011년 경제부문의 핵심과제라는 것을 의미한다.

경공업부문의 생산 확대를 위한 구체적 추진방안으로 △경공업 공장과 기업소의 생산 정상화 △소비자 수요 충족 △경공업의 현대화와 과학화 △지방공업의 발전 △경공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 △원료·자재의 주체화와 국산화 등이 제시되었다. 북한은 지난 수년간 공장 및 기업소의 설비 현대화에 주력하였으며, 특히 위탁가공무역을 통해 섬유류 및 신발



공장들의 현대화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²⁾

북한은 올해에도 경공업부문의 발전을 위해 국가예산의 비중 확대를 통해 생산공장의 현대화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지방공장의 역할을 제고시켜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지방단위의 경공업 공장 가동률 제고를 위해 전기와 원자재 보장에 대한 국가적 대책을 적극 수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공업부문의 주요 과제 중 하나가 인민의 수요를 충족하고 외국산 제품에 대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증산과 함께 제품의 질 제고에도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수년 전부터 “우리의 경공업제품의 양이 적고 질이 낮으면 다른 나라 상품들이 우리의 시장에 밀려들게 된다”면서 중국산 제품의 북한 시장 장악을 우려하였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인민소비품의 질을 제고하는 데 주력해왔다. 생산품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기술갱신 △생산의 전문화 △기술공정 준수 등이 강조될 것이다. 또한 소비자의 수요에 기초한 상품생산을 위해 생산계획부터 인민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공장 및 기업소들이 단지 양적 지표의 계획 달성이 아닌 소비자의 선호나 만족도를 적극 반영하도록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농업부문에서는 종자혁명방침, 두벌농사방침, 감자농사혁명방침과 콩농사방침 등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재차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기농법을 비롯한 새로운 영농방법과 영농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현대적인 축산·양어·과일생산 기지들을 건설하여 농업부문의 다각화를 통한 경제성 제고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 당국은 농업생산의 과학화·기계화·화학화 수단의 효과적 이용, 복잡한 영농기술공정의 과학적 조직 지도, 위성정보에 의한 농업기술 도입에 필요한 연구사업, 농촌경리의 종합적 기계화 실현, 정보기술과 생명공학 중심의 첨단기술에 의한 농업기술체계 개진 등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변수는 과학기술의 발전이다. 과학기술 개발을 통한 첨단산업의 육성과 국방력 강화라는 선군시대 발전전략을 고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장거리 미사일 및 핵무기 개발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첨단과학기술 발전은 북한의 국방력 강화와 경제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은 2011년에도 경제의 비약적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첨단 돌파임을 강조함에 따라 과학기술 및 첨단산업의 발전에 상당한 정책적 비중을 둘 것으로 전망된다. 2000년대 이후 북한의 자력갱생은 이전과 달리 과학기술 발전과 연계되어 경제의 자립성 및 현대화 강화, 생산증대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첨단과학기술 발전은 북한의 국방력 강화와 경제발전을 달성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이다. 최근 들어 북한이 ‘주체철 생산’, ‘CNC 기술’, ‘주체비료’ 등을 강조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북은 2011년에 과학기술과 생산을 밀착시키며 자체 기술개발능력, 제품개발능력을 높이는 데 중심을 두고, 현대화과학화를 추진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공장 및 기업소 등의 생산현장에서는 지난해와 같이 새로운 기술개발을 위한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을 활발히 전개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에는 후계자인 김정은 부위원장이 북한의 과학기술과 첨단산업을 직접 지휘함으로써 ‘선군경제발전’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대내외에 과시할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북한이 올해 안에 3차 핵실험을 비롯하여 우라늄 농축 및 경수로 발전소 등 핵 관련 기술개발 및 시설 건립에 주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세 번째 변수는 철강·화학·기계공업 등 일부 핵심 산업의 정상화이다. 북한은 2000년대 들어 석탄, 전력, 금속, 철도운수 등 소위 선행부문의 정상화에 주력해왔으며, 그 결과 1990년대 중반 경제난 당시 가동이 중단되었던 주요 기간산업의 공장과 기업소들이 지난해부터 가동되기 시작하였다. 최근 북한이 김책제철소, 28비날론연합기업소 등이 정상 가동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대대적으로 보도한 것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해당 공장들에 대해 김정일 위원장이 2011년에도 현지지도를 계속함으로써 생산 정상화에 필요한 설비, 재원 및 인력 등이 집중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부문이 산업 전반의 전후방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북한경제 발전과 자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선행부문을 비롯한 기초산업의 정상화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4대 선행부문 또는 핵심 기초산업들이 2009년까지 국방공업의 발전과 경제전반의 정상화 차원에서 중시되던 것과는 달리, 지난해부터 ‘인민생활 향상’ 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북한 당국은 4대 선행부문이나 기초공업 중에서도 경공업 및 농업 발전과 관련성이 높은 부문(경공업 설비, 농기계 등)에 대해 우선적인 투자를 보장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올해 신년사에서 석탄생산 증대가 최우선적으로 강조되었는데, 이는 석탄생산 증가를 통한 비료(주체비료)와 섬유(주체섬유) 그리고 전력 증산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³⁾ 또한 신년사에서 화학공업의 역할을 강조한 것도 화학공장의 생산 정상화를 통해서 섬유와 수지, 각종 기초화학제품들, 비료와 농약 생산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올해 북한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대외경제협력의 확대, 특히 북·중 경제협력의 확대이다. 자체 성장동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외부의 지원과 경제협력이 절실하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제재와 남·북 관계 경색 등을 감안할 때 북·중 경제협력 확대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다. 지난해 북한이 후계체제 공식화 이전에 2회에 걸친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을 통해 양국 간 협력을 공고히 한 것도 후계체제에 대한 중국의 정치적 지지는 물론, 대규모 경제협력이 절실히 필요했기 때문이다.



핵실험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지속되고, ‘천안함사건’에 따른 한국정부의 5·24 조치로 남·북경협이 위축되면서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는 더욱 심화되었다. 그 결과 북·중 무역은 2010년 1~11월까지 30억 5,655만 달러로 이미 2009년의 무역총액(26억 8,100만 달러)을 넘어섰다.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경우 연간 무역규모도 전년대비 20% 이상 증가한 33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대북투자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최근 중국정부는 북·중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양국 간 경제협력의 물리적 연계성을 강화하는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북·중경협의 활성화는 국제사회의 대북경제제재 조치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으며,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에 따른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북·중경협 확대는 중국의 동북진흥전략과도 연결되어 있다. 중국의 동북진흥계획 추진과 북·중경협 확대와 관련해서 가장 주목되는 것이 ‘창지투 선도구 개발계획’과 라선특별시 개발이다. 김정일 위원장이 2009년 말에 라선지역을 현지도하고, 2010년 1월에는 이 지역을 특별시로 지정하면서 경제무역지대법을 개정한 것도 향후 본격적인 개발과 대외 개방을 대비한 조치로 보인다. 2011년부터 라선지역을 비롯한 북·중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양국 간 경제협력의 가시적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북한경제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 또한 북·중 양국은 2010년 12월 31일 신압록강대교 건설 착공식을 개최하였으며, 신의주의 황금평 및 위화도 개발도 2011년 중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Ⅲ. 갈림길에 선 남북관계, 대화국면으로 전환 가능성

최근 남북관계는 2000년 6.15 선언 이후 최악의 국면에 빠져들었다. 남북관계는 최근 2~3년간 계속 악화되었고, 특히 최근 ‘천안함사건’과 ‘연평도포격’으로 인해 한반도의 긴장국면이 전례 없이 고조되었다. 남북관계가 단기간 내에 복원될 가능성이 크지는 않지만, 대외적 환경의 변화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국내외적 요구와 이해관계 등을 감안할 때 일정기간의 냉각기 이후 남북관계가 경제부문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복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선 북한의 입장에서는 후계체제 안정과 관련해서 남북관계의 안정이 매우 중요하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김정은 부위원장 주도로 군사적 모험주의가 대두되고 있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여전히 북한의 최고 권력자는 김정일 위원장이며, 북한이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있는 경제발전과 북미관계 개선을 위해서도 남북관계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이



다. 북한이 연초부터 남북대화의 필요성과 당국 간 대화 재개를 연이어 제의하는 것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북한은 신년사에서 남북 간의 ‘대결상태 해소’를 지적한데 이어, 1월 5일에는 북한 정부와 정당, 단체들의 연합성명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4개항의 중대 제안을 전격적으로 제시하였다. 4개항의 주요 내용으로는 △당국 간 회담을 포함하여 남북 정당, 단체들 간의 조건 없는 조속한 회담 재개 △남북협력 의지만 있다면 언제, 누구와도 대화 △민족의 중대사와 관련한 모든 문제들을 협의, 해결 △남북 관계개선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 비방 중상 및 상대 자극하는 행동 중단 등이다. 이는 사실상 이명박정부에 대한 조건 없는 대화 재개라고 할 수 있으며, 김정일 위원장의 결심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⁴⁾

이러한 북한의 대화제의에는 미국과 중국의 역할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의 긴장 고조와 북한의 추가적 핵능력 강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미국 내에서도 북한과의 대화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기존의 ‘전략적 인내’는 사실상 한미동맹 강화에는 기여했는지 몰라도,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비핵화에는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6자회담 의장국으로 그 동안 남북한의 대화와 6자회담의 조기 개최를 강조해왔다. 양국의 이러한 입장은 지난 1월 19일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일정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와 9.19공동성명의 이행, 남북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6자회담 조기 재개에 인식을 같이한 미국과 중국이 우회적으로 남북대화와 관계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명박정부는 북한의 대화 제의에 대해 ‘진정성’을 제기하면서 일단 거부감을 표시하였지만, 1월 20일의 군사회담 제의를 수용한 것을 보면 마냥 대화 제의를 거부하는 것은 부담스러웠던 것으로 보인다. 미·중 정상회담을 통한 국제사회의 압박과 함께 집권 4년차가 되는 이명박정부로서는 2011년에는 남북관계의 변화를 모색해야 하는 현실적 요구가 있다. 이미 2010년 6월 지방선거에 나타난 바와 같이 남북관계 긴장에 대한 국민들의 ‘안보 피로감’이 확대되고 있고, 대북 정책 수정에 대한 여론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천안함 공격과 ‘연평도포격’으로 북한에 대한 비판이 높아진 것도 사실이지만,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평화적 관리에 실패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도 함께 높아진 것이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남북경협 활성화의 요구가 제기된다. 한국경제로서는 남북관계 악화에 따른 ‘코리아 리스크’가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한 경제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을 차단하는 한편, 최근 중국의 임금상승 등으로 인한 투자 대체지로 북한이 매력적인 투자대상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남북경협과 관련된 한국 내 생산 연계 및 고용유발효과 등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북한으로서도 남북경협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우선, 한국이 중국 다음으로 제2의 경제협력국이며, 실제 대규모 투자나 경제지원이 가능한 국가라는 점을 북한도 잘 알고 있다. 특히, 금강산관광사업과 개성공단 사업으로부터 벌어들이는 이익을 북한 당국도 외면할 수 없다는 현실적 이해관계도 작용하고 있다. 또한 북중경협 확대에 따른 대중 의존도 심화를 완화하고,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남한과의 경제협력 확대가 필요하다. 정치적 측면에서도 미국, 일본과의 관계개선 및 대외경제 환경 개선 등을 위해서도 남북관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는 점이다.

IV. 6자회담 재개와 남북관계 정상화

남북한은 최근 악화된 관계를 감안할 때 당장 관계개선에 나서기는 어렵겠지만, 현실적인 필요성과 국제사회의 분위기(특히, 미국과 중국의 대화요구) 등을 감안할 때 상반기의 탐색전을 거쳐 하반기부터는 관계 정상화를 적극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내외적 요인을 감안할 때, 한국 정부로서는 북과의 대화 재개 및 경제협력 확대를 통해 북한의 대남 강경 노선과 남북 간의 우발적 충돌 등을 적극 관리하고 불확실성을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북한도 새로운 지도체계의 구성과 체제 안정화 및 경제발전 차원에서 적극성을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의 주도적 역할이 더욱 요구된다.

특히,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톱-다운’ 방식의 합의가 보다 효율적이라는 점에서, 하반기 이후 3차 남북정상회담의 조기 개최를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천안함사건’과 ‘연평도포격’ 등으로 인해 악화된 국민감정이나 정치적 이해관계 등으로 이명박정부가 남북정상회담에 당장 나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11년 연초부터 남북 관계를 대결에서 대화국면으로 전환하고,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전환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명박정부 하에서의 남북정상회담 개최여부는 사실상 금년도 상반기 중으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남북이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협력 사안을 비롯해 최근의 서해상 군사적 충돌 등과 같은 현안 이슈들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고 큰 틀에서의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한편, 남북관계 개선의 가장 큰 제약요인 중의 하나인 북핵문제 역시 6자회담의 재개와 함께 비핵화 프로세스가 본격화될 경우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중재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움직임에 대해 북한은 지난 두 차례의 정상



회담을 통해 6자회담 참여를 분명히 하고 있는 반면, 한국과 미국의 경우 다소 유보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6자회담 개최가 ‘천안함사건’, ‘연평도포격’ 및 2차 핵실험 등에 대해 북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 또한 그 동안의 6자회담 방식과는 달리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회담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6자회담의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회담재개가 필요하다는 점도 한미 양국은 인식하고 있다. 자칫 6자회담의 장기간 공전으로 회담 자체의 동력이 사라지는 것은 원치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근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6자회담 조기 재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남북대화가 재개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2011년 2월말 경에는 어떠한 형태든 6자회담 재개의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2011/01/26)



<각주>

- 1) 『조선신보』는 2010년 10월2일자 당대표자회의 해설기사에서 북한이 2012년 강성대국 달성을 천명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오늘의 국제정세 하에서 나라(북)의 경제부흥과 조선반도의 평화보장, 북남관계의 개선은 서로 연계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북한이 계획경제의 정비, 중국과의 협력을 통한 대외개방, 6자회담 재개, 남북대화 복원 노력을 동시에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 2) “올해 조선에서는 경공업의 비약적 발전을 위한 도약대가 마련되었다,” 『조선신보』, 2010. 12. 25.
- 3) 지난해 신년사에서 “강제가 나와야 쌀도 나오고 기계도 나온다”고 역설한 데 반해, 올해 신년사에서는 “석탄이 팡팡 나와야 비료와 섬유도 쏟아지고 전기와 강재도 나온다”고 주장했다.
- 4) “대화와 협상에 관한 파격적인 제의는 영도자의 결단을 반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조선신보』는 1월 6일자 ‘평화통일의 년대기 열기 위한 중대제안 - 영도자의 결단과 연합성명 발표의 파장’이라는 제목의 해설 기사에서 5일 북한이 발표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연합성명’ (연합성명)에 “확실히 ‘중대제안’ 이라고 부를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코리아연구원(연구기획위원장: 이정철)은 네트워크형 싱크탱크로 정치·외교, 경제·통상, 사회 통합 분야의 국가전략 및 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홈페이지(www.knsi.org) 또는 전화 (02-733-3348)로 회원 등록 및 후원하실 수 있으며, 회비 및 기부금은 공익성기부금으로 인정되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각네트워크 코리아연구원과 아름다운 동행을 권합니다.